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년별 이용 시간을 협의하는 것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 A에서는 정치로 볼 수 없지만, B에서는 정치로 볼 수 있다. A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지만,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② B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A와 달리 B는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가 국정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 ⑤ A, B 모두 회사 워크숍 준비 과정에서 장소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B가 임명한다. A의 재판관 9인 중 3인은 C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D의 장(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또한 A의 장(長)은 C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B가 임명한다.

- ① A는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한다.
- ② A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③ B가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C는 B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 ⑤ D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권을 가진다.

3.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 A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B는 개정된 조례에 맞추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 ②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 ⑤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 지역은 역사 유적이 발굴되면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국가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A에 부합합니다.
을: 우리 지역은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여 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B에 부합합니다.

- ① A는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다.
- ③ B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④ B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⑤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은 B의 실현 방안이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3점]

◇◇국의 정부 형태와 헌법 개정 절차 및 법률 제·개정 절차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국의 의회 재적 의원은 300명이며, 정당별 의석률은 A당 40%, B당 35%, C당 16%, D당 9%이다. 단, 의원들은 의회 의결 시 모두 출석하여 투표하며, 기권과 무효표는 없고, 의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수와 정당별 의석률의 변화는 없다.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A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	×	○	×	×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C당, D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A당, B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면 가결될 수 있는가?	×	○	×	○	○
D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	○	○	○	×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A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B당, C당, D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면 가결될 수 있는가?	○	○	○	×	×

(○: 예, ×: 아니요)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A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 권리를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 B의 보장이 필요하다.

- ①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 ② A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③ B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④ B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A, B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7.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갑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융합적 성격이 강조되는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에서는 의회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부가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반면, 을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이 강조되는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을국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보기 >

- ㄱ.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ㄴ.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 ㄷ. 갑국과 달리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 ㄹ.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지방 선거를 앞두고 A는 ○○ 지역에 복합 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상공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된 B는 복합 쇼핑몰이 유치되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지하였다. 반면, 환경 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C는 복합 쇼핑몰 공사가 진행되면 생태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였다.

-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②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C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A와 달리 B는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 ⑤ A, B와 달리 C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에서 A, B를 낳고 살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갈등이 생겨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하였는데 병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가 있었다. 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정은 D를 출산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20년간 D를 혼자 키웠다. 이후 을과 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을, 정, B, D는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을이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보기 >

- ㄱ. 입양된 C는 갑과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 ㄴ.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을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ㄷ. 을의 사고 당시 D에 대한 친권은 정에게 있다.
- ㄹ. 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A, B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는 도자기 박람회 현장에서만 판매되는 한정판 도자기를 구입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계약을 B와 체결하였다. A는 직접 도자기를 구입한 뒤, 직원 C에게 이를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도자기 전달을 위해 기차역으로 향한 C는 기차역에서 도자기가 담긴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책을 읽으며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D도 기차역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딸을 배웅하고 있었다. 이때 부모와 함께 그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E가 들고 있던 뜨거운 음료를 쏟아 D가 화상을 입었다. 놀란 D가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C의 다리를 물어 부상을 입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C는 움직이다가 바닥에 놓인 박스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쓰러진 박스에서 도자기가 굴러 나와 깨졌고, 그 파편이 튀면서 행인 F가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 ① C는 B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E가 D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E의 부모는 D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D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D는 C에 대한 동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F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C가 F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F에게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1.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학회 소식지

이번 토론회에서는 A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는 “A는 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를 넘어서 그 목적과 내용이 정의롭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그 목적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는 B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A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 보 기 >

ㄱ. A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ㄴ.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사제를 들 수 있다.
 ㄷ. B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ㄹ. B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원회는 ○○사 웹사이트 이용 약관 중 고객이 게시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고 이를 상업적 용도를 포함한 모든 목적에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가 갖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A가 적용된 것입니다.

- ①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②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계약 관계에 국가나 타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③ A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A에 따르면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한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⑤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 오염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은 A에 근거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보이스 피싱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 4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 몰수를 선고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2심 재판을 담당하는 ○○ 지방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소송 당사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① 갑은 기소 이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 ③ 갑에 대한 1심 재판은 ○○ 지방 법원 합의부가 담당하였다.
- ④ 1심 법원은 갑에게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만을 선고하였다.
- ⑤ 2심 법원은 갑에게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4. 민주 선거의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B는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 결과에 대하여 기여하는 정도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A에 위배된다.
- ② 연령에 따라 1표에서 3표까지 차등 부여하는 것은 A에 위배된다.
- ③ 성별, 인종, 종교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A에 위배된다.
- ④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B에 위배된다.
- ⑤ 기표한 투표용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B에 위배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10명이며, 유권자는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한다. 갑국은 1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1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의 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선거구 1~3, 선거구 4~5, 선거구 6~8, 선거구 9~10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한다.
- 선거구 1~3를 통합한 선거구에서 3명, 선거구 4~5를 통합한 선거구에서 2명, 선거구 6~8을 통합한 선거구에서 3명, 선거구 9~10을 통합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선거구 1	20	15	30	25	10
선거구 2	15	10	20	30	25
선거구 3	10	25	30	15	20
선거구 4	15	25	30	10	20
선거구 5	25	30	20	15	10
선거구 6	20	25	30	10	15
선거구 7	25	30	20	15	10
선거구 8	10	15	30	25	20
선거구 9	15	30	20	25	10
선거구 10	20	25	30	15	10

* 정당은 A~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음.
 ** 현행과 개편안 모두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함.
 ***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① 현행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개편안과 달리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 ③ 개편안과 달리 현행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달리 개편안에서는 모든 정당이 의석을 확보한다.
- ⑤ 현행과 개편안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다.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7세)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A가 광고하는 패딩 점퍼를 사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여 고가의 패딩 점퍼를 구입하는 계약을 을(42세)과 체결하였다. 을은 계약 당일에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갑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병(20세)을 만나 병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A의 콘서트 티켓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용돈으로 콘서트에서 사용할 응원봉을 구입하는 계약을 정(34세)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갑의 법정 대리인 무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 ① 갑은 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③ 무가 을에게 계약을 주인하더라도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무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무는 갑의 동의가 없어도 정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7.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실이 불량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국민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관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법률이 어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배된다.

- ①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②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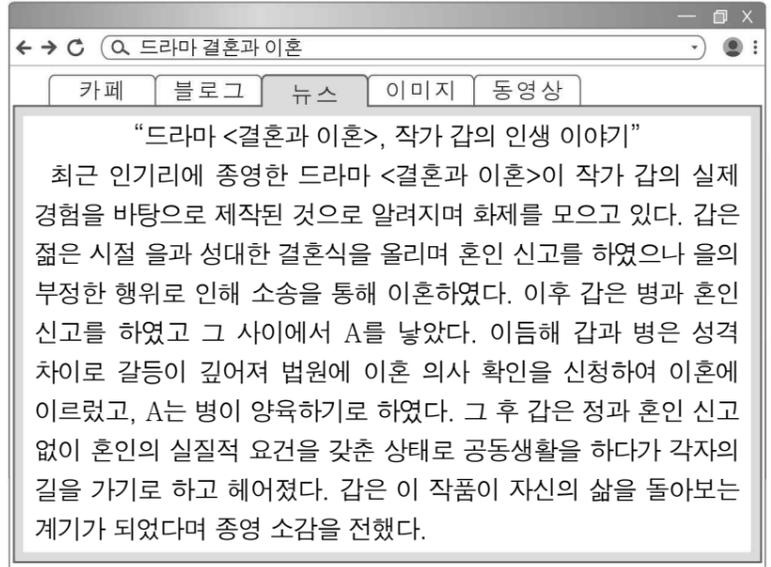
최근 도로 확충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어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위협받게 되었다. 동물 보호 협회는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게시판에 ㉠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였고 ㉡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 의회는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 야생 동물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 보기 >

- ㉠. ㉠을 통해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 ㉡.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였다.
- ② 갑과 을은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과 병의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④ 갑과 병이 이혼함에 따라 갑과 병에게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⑤ 갑과 정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었다가 해소되었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과 을은 층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층에 거주하는 병의 집에 함께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 있던 병이 현관문을 열자 갑과 을은 병을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고, 갑은 욕설을 하며 병의 집 내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에 병은 갑, 을을 고소하였고 갑, 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 수사를 받은 후 검사에 의해 ㉡ 기소되어 ㉢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 선고하였고, 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 보기 >

- ㉠. ㉠ 과정에서 갑, 을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 ㉡. ㉡으로 인해 갑, 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 ㉢. ㉢의 당사자는 갑, 을, 병이다.
- ㉣. ㉣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